

## NCCK, '개성공단 재개선언'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지방문

[CBS노컷뉴스 최경배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찾아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진척되지 못하는 데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는 평화부지사의 행보가 남북교류 돌파구의 단초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도 미국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 남북 화해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이같은 뜻을 알리기 위해 개성공단을 바라볼 수 있는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유엔사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집무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 나핵집 목사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분계선에 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는 유엔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면서, 주권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당함을 알리는 일에 교회협도 마음을 보태고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소)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지방문' /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가시화... 이재명 지사 노력 결실 맺나

李지사, 접경지 봉쇄하며 입법 촉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그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펼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여러 행보가 빛이 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금지하

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더민주·서울구로을) 의원의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

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대북 전단 문제가 한창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6월,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접경을 품은 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는 등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도 했다.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밝혔다. 썬건 기자